

정부, '인구

- 충무서남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치료실, 피켓팅, 안전실, 접수·노획실 등을 설치하였고, 상담원, 간호사, 언어경화과 등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한국여성안관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남.

여성관련 법안 동향

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우에는 16세 이하 함으로써 사립학교
-------------	--------------------------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양육 지원(인

항제(7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지원(안 제23조의4제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진재의원 등 10인)	2024-06-26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학교생활이 곤란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	------------	--

아이돌봄 지원법	2024-06-27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 및 복수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2024-06-27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건강을 증진
-----------------------------------	------------	--

상 자녀를

배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서범수의원 등 13인)	120일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재(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41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

남녀고용평등과
이직지원법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6-28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	------------	--

가족· 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이후 근무장소·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인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범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기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방지(안 제9조제4항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조년유연인 연금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징역유예 기간을 정비하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헌법 제2조의 준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25조 단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우리 사회에 안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13조제2항7호 신설)
	양육비 이행불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0인)	한시적 양육비 지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지급지연 금액에 따른 양육비정기조율에 따라 해당소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지급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조 및 제4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안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안 제25조)
	모자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원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군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1인)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9일에서 151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중·소기업' 산성형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6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1인)	배우자에게 적절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51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등)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39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적원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강화(안 제2조제2항 등)
노·동· 고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제공(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4항제4호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경원의원 등 13인)	중소기업근로자 위약금 프리미엄으로 대용영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금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예 59일에서 101일로 51일로 늘리며, 난임휴가 추가기간도 지원(안 제70조 단서 신설 및 제76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경원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1일에서 151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상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휴가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예에서 5일, 유예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에서 1년 6개월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3항, 제18조제3제1항, 제9조제2항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제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경원의원 등 12인)	근로자가 임신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안 제60조제6항제4호·제5호·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삼의원 등 12인)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가 근로환경 개선(안 제9조제2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민규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이 더욱 충실(제4조제1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인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는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안 제9조제2항제2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안 제76조제3 신설 등)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백숙공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을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소득과 자산 정보를 장차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대지급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도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안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육아휴직과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장 38(나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안 제19조, 제19조제2 및 제19조제4항제1항 등)
자출산· 고령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유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 구축(안 제2조제1항)
	제출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병훈의원 등 15인)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합당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인종차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 제고(안 제3조제2 신설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삼석의원 등 15인)	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도모(안 제46조 신설 등)
	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의 구현'이라는 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안 제4항 등)
	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지출산·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는 '연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 향상(안 제21조제2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명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입양·안고 공제대상자수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안 제59조제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천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기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연구영향평가'에 결산제도' 도입(안 제27조제2 및 제68조제4 신설 등)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천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기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연구영향평가'에 결산제도' 도입(안 제27조제2 및 제68조제4 신설 등)
	모자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1인)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의무화하고,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안 제15조제17항제1항, 제2항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료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안 제70조제2 신설 등)
건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숙주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안 제8조제4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연간 60일로 난임치료료가 기간을 확대하고 전년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인정한 환경에서 난임치료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18조 및 제18조제3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75조 및 제76조제2항)
	모자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민의원 등 13인)	난임치료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명 또는 소독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등 완화(안 제11조제3항 신설)
	모자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민의원 등 13인)	난임치료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명 또는 소독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등 완화(안 제11조제3항 신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우치의원 등 11인)	상간이 멸명형중종간에게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 등 성적착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집에 따라 그 죄에 미친 형집 2년의 1/7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간에 미친 성적착취 근절(안 제92조제9 신설)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성의원 등 11인)	계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불법촬영을 시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제·인간 집단범죄 신고와 신속성 제고(안 제7조제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여성가족부장관은 관찰구급 내에 부모 등 특정인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 구현(안 제21조제5항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사·도, 시·군·구 또는 물론 수사기관을 신고하는 사람으로 하고, 신고를 받은 자에게 대상자나 사법경찰관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제3항제3항)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주의집중을 강화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여성 및 노인 대상자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집단이나 경찰 신고와 성도착 징을 완화하는 제도(안 제11 단항구구를 포함하여) 개정(안 제10조제2항제3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	--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2024. 07. 10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	--------------	---------------------

결혼 이민자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07-01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법·계획	건전가정양육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024-06-27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양육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업무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의 도전과제(II) : 초고령 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78	시사저널	불산·불안 속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서민 주머니 털어' 격양	https://www.kbs.co.kr
---	----	------	---------------------------------------	---

<http://www.fox.com/news/art>

기사링크

날짜	대차명	계목	연구자명	
2014. 11. 11	신원정리	신원정리	김종수	신원정리

유관기관 연구동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의 태도를 검토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
가중처벌 관련 입법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국회입법]

2024.06.28]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999>

가중처벌 관련 입법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사점 도출